野 “신재민 청문회” … 與 “무책임한 공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이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력남용 주장 놓고 충돌
기재위 소집 등 요구
바른미래·평화당도 가세
민주 “정쟁 거리 안된다”

여야는 7일에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남용 주장을 놓고 충돌을 계속했다.

자유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기획재정부의 KT&G 사장 교체 관여와 청와대의 적자 국채발행 강요’ 문제를 대여(對與) 공격의 핵심 소재로 삼고 연일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공세라고 맞받았다.

여야가 연일 대립하는 핵심 쟁점은 신 전 사무관 주장의 진상을 파헤칠 상임위원회 소집과 청문회 개최 여부다. 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로 규정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집과 청문회 개최를 거듭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민생 현안을 다루는 것이 아닌 정치공세용 상임위 소집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에 더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당의 입장이 곤란한 상황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진실을 밝히자는 주장에 상임위와 청문회에 응하는 것이 여당이 해야 할 당연한 도리이고, 공익제보자의 인권을 지켜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상임위 차원에서 사실 규명도 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실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내 회의에서 ‘신재민 사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선 “야당에서 상임위 요구를 하는데 해당 상임위 간사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크게 정쟁으로 갈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기재위를 여는 것은 애당초 말이 안 됐고, 청문회할 거리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새해 들어 첫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드러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소집과 함께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안을 발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검찰이 ‘뿌리 자르기’ 수사로 개인 일탈로 몰아가기 십상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특검감’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같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초당적 의원외교 강화를 역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머지않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예상되는데 국회가 답방을 환영하고 국회 방문이 있으면 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모두발언에서부터 현안에 이견을 드러냈다. 홍 원내대표는 “새해를 맞아 우리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을 챙기고 평화를 준비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의 요구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신재민 의혹에 대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불러낼 수 있는 기재위가 돼야 한다”며 “국민적 의혹, 특히 사찰 의혹에 대해 청와대의 불법과 월권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도 “국회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청문회 내지는 위원회를 열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거듭 요구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화두는 ‘선거제 개혁’

문희상 의장, 5당 대표 회동…소상공인 기본법 등 논의

여야 5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선거제도 개혁 등 현안을 논의했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새해 첫 ‘초월회’ 모임을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갔었는데 그들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제일 원한다”며 “(법안을) 5당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표께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얘기했는데, (법안을) 일찍 발의했던 정당 입장에서 감사하다”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 대표들은 한목소리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당 의석수가 몇 개 늘어나는지에 집착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위해 더 큰 결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5000만명에서 3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대통령 직속의 시민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집단지성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고, 대통령이 발의해 결정권을 국회가 가지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비공개 회동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선거제 개혁 권고안이 화두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오는 9일 선거제 개혁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개특위 전문위원을 불러 그동안 특위에서 논의한 사항과 함께 권고안의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 자문위의 권고안 중 다수안에는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골자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의원정수 20% 확대 등의 방안이 담겼다고 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정 대표는 이 같은 권고안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의원정수 20% 확대, 즉 300명의 의원정수를 360명까지 늘리는 권고안에 대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반대” 61.5%

리얼미터 설문 … 문대통령 국정지지율 46.4%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1일 제외) 전국 유권자 200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 오른 46.4%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1.5%포인트 내린 48.2%였다.

리얼미터의 주간집계 기준으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팽팽하게 맞선 것은 이번이 6주째이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은 2주째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에 48.1%와 47.9%를 기록하며 40%대 후반을 유지하다 3일과 4일에 45.3%와 44.8%로 하락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둘러싼 국회 운영위원회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직후 국정지지도가 올랐으나, 이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가 확산하자 하락 반전했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1.5%포인트 오른 38.3%, 자유한국당은 0.9%포인트 내린 24.8%, 정의당은 0.3%포인트 내린 8.7%, 바른미래당은 0.9%포인트 내린 6.2%, 민주평화당은 변동 없이 2.4%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61.5%가 전 전 대통령의 사망 시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데 대해 ‘법 개정을 해서라도 국립묘지 안장을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특별사면이 됐으므로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6.8%였다.

이념성향 별로는 진보층(반대 78.7% vs 찬성 12.8%)에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도층(64.2% vs 28.0%)에서도 반대가 우세했다. 다만 보수층에서는 반대 44.2%, 찬성 44.5%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린 가운데 찬성 의견이 근소하게 높았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유시민 “정치인은 을 … 대선 출마 안한다”

유튜브 ‘고칠레오’ 공개…알릴레오 조회수 200만회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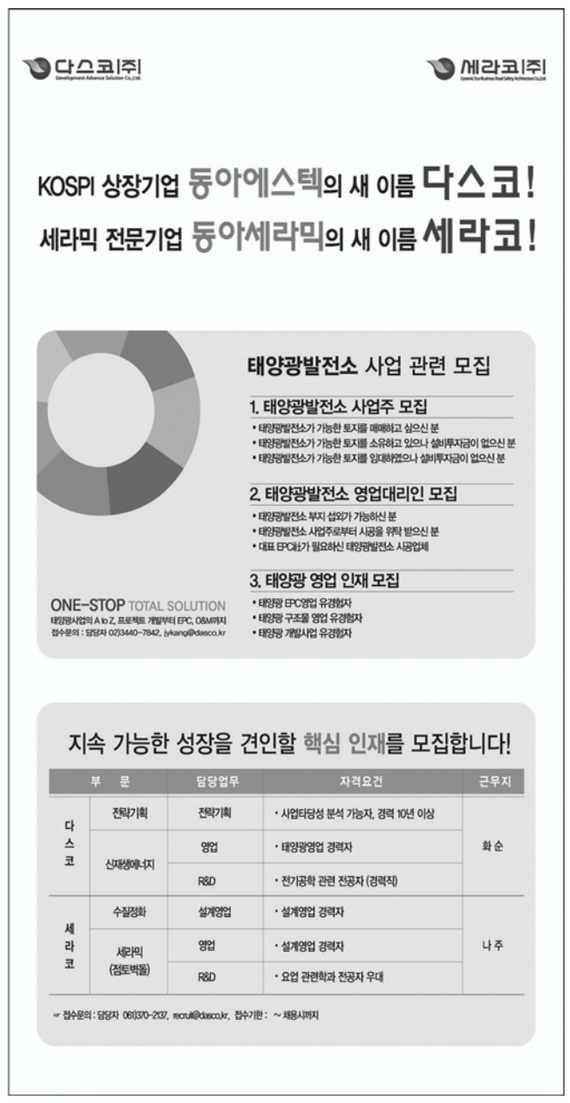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7일 “선거에 나가기 싫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계복귀설을 거듭 부인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을 통해 공개한 팟캐스트 방송 ‘고칠레오’를 통해 “제가 만약 다시 정치를 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준비를 하고, 실제 출마를 하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겪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이사장은 특히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가의 강제 권력”이라며 “국가의 강제 권력을 움직여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무거운 책임을 맡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다 을(乙)이 되는 것”이라며 “저만 을이 되는 게 아니라 제 가족도 다 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선출직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유 이사장은 ‘지지층이 제발 출마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엔 “다른 좋은 분이 많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4년 뒤 자신의 모습에 대해 “3년 반쯤 후에 대선이 있다”며 “그때 되면 노무현재단 이사장 임무도 완수하고, 날씨만 좋다면 낚시터에 앉아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의 말은 못 믿는다고 하는데 저는 정치인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제 삶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지난 4일 정치·사회 현안을 다루는 ‘유시민의 알릴레오’ 첫 방송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가짜뉴스’를 반박하는 ‘고칠레오’를 추가 공개했다. 유 이사장이 방송을 업로드하는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은 이날 구독자가 50만명에 육박했으며, 알릴레오 첫 방송 조회 수도 200만회를 돌파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